

일본의 구조개혁특구제도와 시사점

- 지역별 구조개혁특구를 지정하여 지방의 새로운 활로 개척 필요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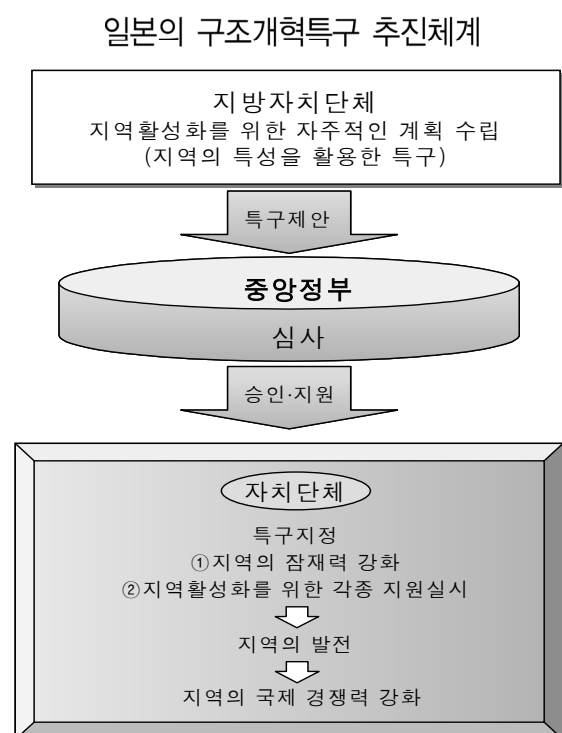
- 일본 정부는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2년 7월 「구조개혁특별구역법」을 제정하여 2003년 4월부터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물류, 교육, 산학연구 등 117개 특구를 지정, 시행하고 있음
 -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는 특정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 지역에 한해 규제를 개혁하는 규제개혁의 다양성을 인정한 제도임
- 구조개혁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의 특례를 인정받는 특정 구역을 설정하고, 규제개혁을 실행하여 지역의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
- 우리나라에서도 규제개혁을 통하여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, 나아가 국가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임
 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구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함
 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구는 지역단위에서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,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
 - 그러나 환경파괴와 난개발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

1.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도입배경

- 일본은 제조업의 해외진출이 급증하면서 해외생산비중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설비 투자와 입지는 눈에 띄게 감소하였음
 - 해외생산비중은 1988년 5.7%에서 2001년 14.5%로 2배 이상 증가
 - 공장의 국내입지건수는 1995년을 100으로 하였을 때 2001년은 45%로 대폭 하락
- 일본 정부는 경제의 장기 침체와 지역의 경제불안을 해소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 7월 종합규제개혁회의에서 구조개혁특구제도 도입을 제안, 2002년 12월에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을 제정하고 2003년 4월부터 구조개혁특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
 - 111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129건의 특구계획 중 117건이 제1차 구조개혁특구로 인정받았음
 - 앞으로도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추가할 예정임

2.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기본이념 및 특징

- 일본 정부는 「규제개혁은 전국적으로 일괄적인 형태를 취해야 한다」라는 기존 인식으로부터 「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」라는 발상의 전환을 함
- 구조개혁특구의 기본이념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 제안에 의한 규제개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
 - 국가는 사전에 모델을 제시하지 않으며, 지방자치단체, 민간이 지방의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제안하여 규제를 완화함



- 개별 규제개혁 및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갖고 시행하며 국가의 재정지원 등의 조치는 시행하지 않음
- 구조개혁특구의 특징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제한적 규제개혁을 실시하며 신청, 승인 등의 절차를 일원화하여 범부처적으로 대응함

3.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지정사례

국제물류특구

- 대규모 공항 및 항만을 보유한 지역에서 국제경쟁력을 갖는 서비스와 비용을 실현하기 위한 특구
 - 주요 승인지역 : 지바縣(국제공항특구), 동경都(국제항만특구), 요코하마市(국제물류특구) 등

농촌활성화특구

- 지역농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영형태의 도입 및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그린투어리즘을 촉진하는 특구
 - 주요 승인지역 : 야마나시縣(와인산업진흥특구), 内海町(올리브진흥특구), 豊岡市(그린투어리즘특구), 와카야마縣(신고향창조특구), 青木村(도시농촌 교류특구) 등

교육특구

- 지역특성과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커리큘럼을 인정하는 특구
 - 주요 승인지역 : 오오다市(외국어교육특구), 八王子市(체험형학교특구), 교토市(인재양성추진특구), 北本市(유아교육특구), 나가노縣(유치원조기입학특구) 등

복지특구

- 특별양호노인홈에 대하여 공설민영방식 등에 의해 주식회사가 시설운영을 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특구
 - 주요 승인지역 : 지바縣(건강복지특구), 宇土市(복지커뮤니티특구), 菊池市(복지서비스지원특구) 등

-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핵으로 하여 이들의 지적 자산을 IT, 바이오 등의 신규 산업으로 결합하기 위하여 제도정비를 도모하는 특구
 - 주요 승인지역 : 오카야마縣(IT특구), 아오모리縣(생명과학활용특구), 야마가타縣(조정밀기술집적특구), 츠루오카市(바이오캠퍼스특구), 고베市(첨단 의료산업특구) 등

4.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

- 우리나라에서도 규제완화를 통하여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구도입이 필요함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구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, 재정경제부,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률 제정이 우선 이루어져야 함
 - 특구는 범부처적인 개혁이 필요한 제도로서 관련 부처가 참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
-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역특성을 살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규제 때문에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례가 있음
 -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토지 이용 규제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
- 구조개혁특구와 같은 제도는 특정 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효과가 확실하고 빠르게 나타나 사업추진이 수월할 것임
- 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전략에 의해 선정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성공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
- 지방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 완화가 자칫 환경, 토지이용 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바, 난개발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

국토연구원 장철순 책임연구원(csjang@krihs.re.kr, 031 - 380 - 0202)